여야 강대강 대치 '입법·예산 전쟁'으로 이동

사상 최대 '821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힘겨루기 예상

미래기금·尹국조·민주유공자법도 뇌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산과 입법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함께 챙기기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총 13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예산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천억원의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호남 특혜론과 서남권 차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감한 재원을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미래대응기금 3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차기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역시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려는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역시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진수 기자



인사 나누는 김민석-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정부·조직위원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산림장비 도입·관리법' 대표발의

"장비 성능·안전성 높여 재난 대응 강화"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와 부품 수급 차질, 대체 장비 도입 지연 등으로 산림재난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운용·정비·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일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장비 등 산림장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장비의 도입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입부터 검사·정비·처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산림장비 도입·관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산림장비 도입심의위원회 설치 ▲중요 산림장비 도입 전 기술검토와 심의 ▲산림장비 검사·검수 및 인증제도 마련 ▲개인보호장비 지급·관리 기준과 산림장비 연구개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전 기술검토와 객관적인 심의는 물론 부품 조달과 정비·교체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림장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위성락 "광주 군공항 이전 韓美 협정 합의 다 돼"

'호남 반도체' 미군측 알박기 우려 일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한미 간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간엔 광주 말고도 군 기지 이전 계획들이 있는데,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해 문안을 협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광주 기지도 그 (포괄) 협정안에 넣어 같이 대처하길 바라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면서 "(포괄협정 논의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국회 운영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기지에서 쉽게 나가지 않으려 할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을 언급한 뒤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였을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이 이뤄진 직후 양측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이전을) 방해하고, 무엇을 뜯어내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대체 시설을 만들어 (미군이) 지금의 시설을 거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만약 (이전) 시기를 더 당기려면 (우리가)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은 과제와 관련해선 "주로 (대체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등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은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한미 양국은 광주와 대구 등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한 포괄 협정 체결을 협의해왔다.

/김진수 기자

안도걸, 자본금 5조원 규모 '서남권투자공사' 추진

법안 발의…정부·정책금융·지자체 출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동남을)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서남권의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본금 5조원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전남광주시 등이 출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조합·협회 등에도 출자 참여의 길을 열어 지역이 투자기반 조성과 성과 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